


보 도 자 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2022. 10. 5. (수) ▪ 총 3 쪽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성과관리홍보팀 김민영 팀장 ☎02-3460-5149	
	성과관리홍보팀 정소원 행정원 ☎02-3460-923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9월 28일(수), 연구원 10층 세미나실에서 인권정책 연구 및 인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공동 세미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실장, 박성훈 정보·통계 연구센터장, 박경규 연구기획팀장, 김민영 성과관리홍보팀장,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배상균 부연구위원, 조제성 부연구위원, 장진환 부연구위원, 정유나 부연구위원, 김민지 부연구위원이 참석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인권정책과장, 정의석 사무관, 이태윤 사무관, 문진경 주무관, 오수진 주무관이 참석했다.
-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1주제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 조제성 부연구위원은 신당역 사건을 통해 나타난 현행 스톱킹 법률 및 관련 대응책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스톱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논의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 및 인권보장 ▲피해자 지원체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연구원 및 인권위의 참가자들은 현행 대응책의 주요 미비점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 오수진 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은 제2주제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오수진 주무관의 발제 후, 세미나 참가자들은 DNA신원확인정보 채취가능 대상범죄의 범위, 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요건, DNA신원확인정보 보관기간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 개선방안 모색 시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등 주요 검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분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질적인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은 지난 7월 5일,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인권정책 연구 및 인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첫 공동세미나를 9월 28일에 개최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인권 분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별첨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국가위원회 공동 세미나 사진

